

민주 '특검·쟁점법' 강공 드라이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주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지난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 5월 국회서 처리 방침 녹색정의당 등 5개 야당 공조 의사 이태원·전세사기특별법 등 대어 압박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주요 상임위 선전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22대 국회 원(院) 구성 시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통상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안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온 것뿐 아니라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 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하던 관행을 모두 따르지 말자는 강경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법사위원장만 큼은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제는 다른 주요 상임위원장도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달여남은 21대 국회에서 '총선 민심'을 등에 업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법 사법(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 개

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제2 양곡법), 이태원 참사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 다른 5개 야당도 이미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조 의사를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토요일인 전날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는 '거부권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내용을 살짝 수정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거대 야당의 강공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총선 참패 후유증이 채 가지지 않은 데다 지도부

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일대오로 대야 전략을 펴는 것 자체가 여의찮아 보인다.

단적인 예로 민주당이 지난 18일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는 동안 국민의힘 대응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규탄 입장문'을 내는 데 그쳤다. 회의장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은 전무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농해수위 위원 절반 이상이 낙선한 점도 이 같은 무기력한 대응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내 관계자는 "어차피 본회의에 올라가면 우리가 민주당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고도했다.

민주당이 당장 5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5월 국회 소집을 위한 원내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직권 개입은 안 된다고 압박하는 정도가 대응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 상태에서 가장 큰 부담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현재로서는 '결사 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처지에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전략기획위원장 민형배·법률위원장 박군택

〈광주 광산을〉

〈광산갑〉

민주당 주요 당직 인선 발표

사무총장 김윤덕...친명 대거 등용

더불어민주당은 21일 4·10 총선 이후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주요 당직에는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면서 '이재명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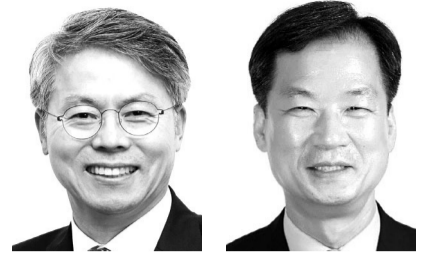
신임 사무총장에 친명(친이재명)계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이 임명됐고, 수석사무총장은 강득구 의원이,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이 맡게 된다.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당선자가 선임됐다.

광주지역 유일한 재선인 민형배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게됐고, 광주 광산갑 박군택 당선자가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가 일괄 사의를 표명해 이에 따른 당직 재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임 김 사무총장은 22대 총선을 통해 3선에 성공했고, 앞서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 전임 조정식 전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르며 국회의장직 도전 등을 이유로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민형배 의원

박군택 당선자

친명계인 김 사무총장은 19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갑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1대에는 전북 전주갑에서 당선됐고,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사수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민주연구원장을 맡는다.

정책위의장 자리에는 22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진성준 의원이 임명됐고, 민병덕 의원이 정책위원회 수석부장을 각각 맡았다.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이, 대변인은 한민수·황정아 의원이 맡는다. 김경호 의원은 교육연수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국민소통위원장에 최민희 당선인, 대외협력위원장에 박해철 당선인이 직책을 맡았다. 대표정부조정실장에는 경기도당위원장 신분으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해 논란을 부른 김우영 당선인이 맡게 돼 '친명'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웅현 홍보위원장과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이들 주요 당직자는 오는 8월까지이던 이 대표의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이행법' 이번주 발의

미지급 양육비 선 지급 후 청구...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금주 발의된다.

201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래 '선지급' 제가 법안에 명시적으로 담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이 담긴다.

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양육비 대지급특별법과 결은 비슷하지만, 나라에서(양육비를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선지급을 명시했다"며 "최종안을 두고 여가부와 논의를 거쳤고, 21

대 국회 내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이 2023년 6월 기준 17.2%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탓에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 선언

"이재명 대표와 강력 투톱 체제로 개혁 임무 완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1일 "시대의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13조원 확보를 위해 (여당 등과)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며 "법

제사법위원회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확보해 국회 운영을 책임 있게 주도하겠다"고 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고위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통상 3~4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인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한정애 의원(이상 4선), 강훈식·김성환·박주민·송기현·조승래·진성준·한병도 의원(이상 3선) 등이 거론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